

# 中國의 「東北工程」과 韓半島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 전략’인가?

윤 휘 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때까지 고립상태에 있던 중국인민은 객관적인 세계정세와 중국의 낙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선진적인 東南沿海지역과 낙후된 내륙지역(주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내륙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종래의 문화적·종교적 이질감에다 경제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때의 박해<sup>2)</sup>로 응어리져 있던 울분까지 겹쳐져 일부 소수민족들(新疆위구르족, 티베트족 등)은 분리독립운동까지 벌이고 있다.<sup>3)</sup>

더욱이 한국에서는 1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조선족)가 있고 이들 중에는 ‘재

외동포특별법’의 재정을 통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와 「국적회복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한국에서 5-6년씩 체류하다가 돌아간 중국동포는 이미 한국식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에 물들면서 점차 ‘한국인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들은 비록 한국인의 차별에 대해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달된 한국사회나 비교적 풍요롭게 사는 한국인에 대한 동경심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마을 가운데는 상당수가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나 뉴스를 시청하고 있기도 하다. 상당수의 조선족은 중국에서 거주하던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간에 정서적·의식적으로 한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맞물려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를 보여주는 징후들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 여하에 따라 그들의

논문접수일 : 200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4월 20일

- 1) 2000년 11월 실시된 제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총 인구 12억 6,583만 명(홍콩특별행정구의 678만 명, 마카오특별행정구의 44만 명은 제외) 가운데 소수민족은 1억 6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1%이다. 연변조선족자치구의 경우 전체인구 220만 명 가운데 조선족 비율은 39.7%인 85만 4,000명이다. 소수민족의 집중 거주지역은 611만 7,300km<sup>2</sup>로 전 국토의 63.72%나 된다.(김태경, “소련처럼 망할 수도”...극심한 ‘해체 공포증’ [특별기획-중화패권주의 ④]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오마이뉴스(OhmyNews)』, 2004년 10월 13일자). 현재 소수민족이 해당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新疆위구르자치구(59.6%)와 西藏자치구(95.1%)이다.(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形成的特點」, 『群言(京)』 1989년 3기, 11-12쪽)
- 2) 1958년의 ‘反右派투쟁’에 이어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大中華主義(Great Chinese Nationalism)에 기초한 민족의 단결이 추창되면서 기타 민족의 존재가 부인되었고 모든 소수민족은 ‘漢族化’를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거나 탄압을 받았으며 조선족도 갖가지 고초를 겪었다.(王建民 外著, 『中國民族學史』 上·下,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98, 175-265쪽; 『延邊大事記』,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0, 290쪽, 471쪽;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55쪽, 95쪽)
- 3) Colin Mackerras, *China's Minority: Integration and Modernis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 Press, 1995; David Deal, “National Minority Policy in Southwest China, 1911-1965”, Ph.D. Dissertation, Univ. of Washington, 1971; 西川潤, 「轉換期の中國民族政策」, 『世界』 제466호, 1984. 9).

한반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북지구(만주)에서는 매년 수많은 북한 탈북자가 조선족 사회에 은거하고 있다. 2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탈북자들은 중국 내 친척이나 知人(주로 조선족)을 찾아 접촉하면서 삶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북한 탈북자들과 접촉하게 된 중국 내 조선족 가운데 상당수는 민족적 동질성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북한 탈북자들은 ‘중국국민’으로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에서는 20세기 이래 중국 및 한반도 중북부에서 존재했던 上古史(고조선·고구려·발해)를 한민족의 역사라고 가르쳐왔고, 중국을 방문하는 일부 한국사람은 중국 조선족에게 공공연히 ‘滿洲收復論’을 설파하거나 백두산에 올라가 태극기를 휘날리곤 했다. 최근에는 1909년 일제와 清朝 사이에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론화하는 움직임과 아울러 ‘간도가 한국의 땅’임을 주장하는 단체나 언론 論調가 증가하고 있다.

상술한 정황에 직면한 중국정부에서는 대내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들의 ‘중국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정부는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를 단절시켜 양 지역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함으로써 남북한에서 제기되는 ‘실지수복론’의 허구성을 입증시키고,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분리독립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신강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비롯한 서부지구 거주민에 대해서는 이미 「西部大開發」 정책을 시작하고 있고,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동북지구에 대해서는 「동북공정」(Northeast Project)<sup>4)</sup>과 아울러 「東北振興戰略」<sup>5)</sup>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낙후되고 소외된 서부지구를 개발해서 해당지구 주민의 생활향상을 통한 경제적 박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자는 중국의 동북지구와 한반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향후의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비책이나 대응논리, 경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상술한 중국의 國情추이를 살펴볼 때 우리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역사관·민족관·영토관·국가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 동시에, 중국의 한반도 및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전략’의 일면을 드러내주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북공정’은 중국의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전략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것은 ‘동북공정’과 한반도의 상관성 연구의 필요성을 배가시켜준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인 전략인가?’ 아니면 ‘방어적이면서도 공세적인 성격을 띤 전략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이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향후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4) 이것의 원명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으로 “東北邊疆(Northeast Borderland of China)의 역사와 현상을 연속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국의 변강민족정책과 「동북공정」의 상관성, 「동북공정」의 주요 사업내용이나 조직기구 실태 등에 관해서는 윤휘탁, 「현대중국의 邊疆·민족인식과 ‘동북공정」」(『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 184-205쪽) 및 이희욱,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구 실태」(『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태와 허구성』, 고구려연구재단 제1차 국내학술회의 논문집, 2004년 10월 26일, 64-72쪽)를 참조 바람.

5) 「동북진흥전략」은 주로 일제시대 때 갖추어진 ㉠ 낡은 공업(기계·전기·전력·선박·자동차·석유화학·야금업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 농업발전, 식량생산, 상품생산, 농산물 가공업의 제고, ㉢ 탄광산업지구의 환경개선 등, ㉣ 3차 서비스업 발전, 금융 현대화, 非公有制 경제 발전, 사회보장 체계 확립, ㉤ 투자환경 개선, ㉥ 교통·자원·수리 등 기초설비 시설건설, ㉦ 大連을 동북아의 국제항만으로 건설하는 것 등이다(「六大任務事項政策 東北振興戰略全面實施提速」, 『長城在線』(http://www.hebei.com.cn) 2004년 9월 27일; 馮傑, 「振興東北 東三省重要塑造自己的形象」, 『今日中國』 2004년 3기; 「東北振興戰略實施全面提速」, 『振興東北暨東北亞合作國際研討會要旨』(http://www.nova.gov.cn/showdoc/).

그 문제는 ‘중국은 패권주의 국가인가?’ ‘단지 평화적으로 부상하는(“和平崛起”) 大國일 뿐인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II. 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동북공정」

한편 중국에서는 경제건설을 위주로 한 개혁·개방정책과 아울러 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목되면서 자본주의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만연되기 시작했다. 국제질서 역시 변해왔다. 즉 이념과 체제 대결에 기반을 두었던 냉전적 세계질서가 국익 우선의 냉혹한 다원체제로 바뀌면서 종래의 계급투쟁 위주의 역사관은 중국 내에서 점차 빛을 잃어갔다. 그 대신 각 민족의 단결과 인민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統一의 多民族國家論」이 강조되어왔다. 또한 中華文明 혹은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과시해서 중국국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려는 「新中華主義」 문명사관(혹은 歷史工程)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에서는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의 열정을 고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나 연설 등을 통해 ‘애국주의’ 주창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중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sup>7)</sup>에서는 중국의 근·현대 역사를 ‘侵略 ↔ 抵抗’, ‘愛國 ↔ 賣國’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경직된 역사인식에서는 ‘침략 ↔ 저항’, ‘애국 ↔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틀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중간적

사고영역이나 삶의 공간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역사관에는 외부의 침략(약탈)세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중국인민만이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침략세력에게 협조해서 一身의 安危를 피하는 것(매국)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굳건히 저항하는 것(애국) 사이의 양자택일 밖에 놓여 있지 않다. 전자는 惡이고 후자는 善이다. 중국정부가 중·고교 학생들에게 고취시키고 있는 역사인식과 역사적 덕목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만의 독자적인 역사교육이나 민족적 뿌리와 관련된 역사인식의 공유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각 민족의 단결과 인민의 애국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선언적 차원에서 점차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중국은 한족과 非한족(중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 부름)이 상호 경쟁하면서 분열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해왔다. 이때 소수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공헌을 했다. 따라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민족(중화민족)이고 그들의 역사적 활동(왕조 건설)은 모두 중국역사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민족이 세운 왕조들의 각각의 관할 범위를 합친 것이 ‘역사상 중국의 강역(영토)’이다.”<sup>8)</sup> 이것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오늘날 중국 국가주의 역사관의 핵심을 이룬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중국 동

6) 尹輝鏞, 「中國의 愛國主義와 歷史教育」(『中國史研究』 18집, 2002. 5), 269-301쪽.

7)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中國歷史」(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第三冊(瀋陽: 人民教育出版社, 1997);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中國近代現代史」(高級中學課本) 上冊(必修)(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99).

8)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중국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명시하였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中國·中國疆域’의 개념·범위·형성과정,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구성원인 중화민족의 형성과정과 특징,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귀속성 판단,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한계 등에 관해서는 윤희탁,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統一의 多民族國家論』과 그 한계-」(『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史論』 40집,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 榮久策, 「中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費孝通 主編,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王柯, 「民族與國家-中國多民族統一國家思想的系譜」(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彭英明 主編, 「新編民族理論與民族問題教程」(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1) 참조.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청조의 최대관도였던 1750년대부터 1840년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中國版圖를 ‘역사상’의 중국 강역’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譚其驤,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년 1기, 38

북지구에 적용시켜본다면, 이 지구에서 활동한 고구려 민족이나 발해 민족은 모두 중국민족이 된다. 또 그들의 역사 역시 중국사에 속하게 되고 이들 왕조의 관할구역 역시 중국의 영토가 된다. 결국 이 논리가 동북지구에도 적용되면서 「동북공정」식의 ‘滿洲觀’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형성에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시각에서 중국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다. 가령 중국공산당 기관지 『光明日報』에서는 중국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단정한 뒤, 중국 내 각 민족의 역사과정에서의 ‘융합성’과 ‘단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전통을 받아들여 축적하고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적하면서 생겨난 민족 응집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 민족의 역사상의 상호학습·상호흡수·상호의존·공동창조와 발전과정의 연구, 소수민족이 祖國(중국)의 번강을 개발하고 중국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바친 공헌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sup>9)</sup>

이 글의 의도는 오늘날 소수민족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족과 한족 사이의 역사상의 투쟁이나 반목·분열의 측면보다는 상호융합과 단결의 측면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에 공헌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내 ‘민족간 단결’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일부 소수민족의 소외감과 분리독립운동을 의식한 중국정부가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을 고취시켜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개혁·개방정책과 급속한 시장 경제화에 따른 중국 내부의 다원적·분산적·원심적인 사회기운과 맞물려 표출되고 있는 민족적·지역적 모순에 대한 중국적인 역사해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역사인식에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sup>10)</sup>

한편 최근 중국사회에서는 ‘중화민족’·‘중화문명’이라는 말이 중국정부의 국가정책에서 자주 오르내린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화민족 혹은 그들이 이룩한 중화문명의 유구함과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국가주의 고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社會主義 精神文明 建設」·「夏商周斷代工程」·「中國古代文明(中華文明)探源工程(뿌리찾기 프로젝트)」 등이 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라는 슬로건은 1986년 9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중공중앙 결의」<sup>11)</sup>가 공식화되면서 역사적 당위성·합의·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중국정부는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혁명적 사회조류와 反전통의 흐름 속에서 비판받아 왔던 儒家문화 가운데 ‘비판적으로 계승된’ 가치 덕목을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재활용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의 정신유산인 유가문화의 비판·부정이 중화문명(문화)의 卑下나 자민족 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국정부의 국가주의 역사 프로젝트인 「夏商周

9) 鄒逸麟, 「中國多民族統一國家形成的歷史背景和地域特徵」, 『歷史教學問題(滬)』 2000년 1기, 38쪽; 趙永春, 「關於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幾點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년 3기, 1-2쪽; 張碧波, 「中華疆域觀念與歷代邊疆政策—以東北邊疆爲例—」,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년 6기, 15쪽.

9) 『光明日報(京)』, 2000년 1월 7일자, C3; 陳理, 「重視統一多民族國家歷史的研究」, 『光明日報(京)』, 北京: 2000년 1월 7일자.

10) 앞의 글,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統一的 多民族國家論과 그 한계—」, 116쪽.

11) 「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1986. 9. 28)(有林 外 主編, 『國史通鑿』 제4권(1976-1995),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1996, 857-861쪽에 所收). 공산당 문건이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人民日報』 1981년 6월 29일자; 鄧小平, 「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開幕詞」(1982. 9. 1), 『鄧小平文選』 제3권(北京: 人民出版社, 1994), 2-3쪽; 『중국 헌법』, 제19-24조 참조.

斷代工程」은 1996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문헌상으로 商과 夏의 역사에 관해서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는 夏·商·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중화문명의 기원 시기를 끌어올리고 그 실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sup>12)</sup> 중국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화문명의悠久함과 위대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중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하상주단대공정」은 외국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중국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 역사를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sup>13)</sup>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으로나 사료상으로도 많은 이견을 야기하고 있다. 사료상으로 夏·商의 존속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斷代의 시작연도와 멸망연도를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또 다른 국가차원의 역사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공식화된 「中國古代文明(中華文明)探源工程」이다. 중국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2000년 8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古代文明研究中心>를 설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대문명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의 傳說시대로 알려진 五帝의 문화·사회 및 사회제도, 漢字의 기원·발전과 고대문명의 관계, 炎帝·黃帝부터 堯·舜·禹 시기까지의

전설에 대한 정리·연구, 華夏族의 기원과 중화민족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증, 중국 고대문명과 세계 고대문명의 비교 등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sup>14)</sup>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는 전설시대를 역사시대로 전화시켜 전설로만 전해져온 중화문명을 歷史化함으로써, 중국인민의 자긍심과 중화주의 열정을 고취하여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려는 중국정부의 통치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상술한 국가주의 역사관이나 역사 프로젝트는 역사속에서의 중국인민의 융합성과 단결성, 중화문명의 찬란함을 顯示함으로써 중국 내 소수민족의 단결과 중국인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강화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지구에 투영되면서 2002년에는 「동북공정」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현대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 특히 중국의 민족관·영토관·국가관·역사관이 凝縮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동북공정」의 추진배경과 의도

원래 1950~1960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나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저서에서는 고구려사를 한반도의 신라·백제와 더불어 삼국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기초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一史兩用論”<sup>15)</sup>을 거치면서 종래의

12) 이상의 내용은 <http://www.china5000.cn/wenming/statics/duandai/>에 의거한다. 이 공정에는 역사학, 고고학, 천문학, 연대 측정 기술 관련 분야의 30여 개의 기관, 200여 명이 참가하여 9개의 대과제와 44개의 전문 과제가 설정되어 기본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다. 상세한 내용은 「夏商周斷代工程: 華夏溯源」(「南方週末」) 및 관련 사이트 <http://www.sylib.net/sub/magazine/010425c.htm>을 참조 바람.

13) <http://www.sylib.net/sub/magazine/010425c.htm>.

14) 이상은 <http://www.chinesetop.net/Article-Show.asp?ArticleID=235>에 의거한다.

15) “하나의 역사를 양쪽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 고구려 수도가 평양으로 천도되기 이전의 역사는 정치중심이 오늘날 중국 내에 존재했으므로 중국사로 귀속시키고, 천도 이후는 정치중심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으므로 한국사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孫義學 主編, 『世界中國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5; 譚其驤,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史疆域』, 『邊疆史地研究』 1991년 1기, 38쪽; 張英, 「고구려 귀속문제에 대한 중국학자의 관점」, 『高句麗의 正體性』(고구려연구회 창립10주년 국제학술회발표논문집), 2004. 6, 205쪽 참조)과, ㉡ 고구려 유민의 3/4과 영토의 3/4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계승했고 그 나머지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계승했으므로 고구려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사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국사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孫進己, 『東北亞各國對高句麗土地人民文化的繼承』, 高句麗研究財團 編, 『한국사 속의 고구려의 위상』(고구려연구재단 주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4. 9, 31-41쪽).

“고구려사=한국사” 논리는 “고구려사=중국사” 논리로 바뀌기 시작하다가 2002년 「동북공정」 계기로 “고구려사=중국사”라는 논리가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다.<sup>16)</sup>

그렇다면 1950~1960대까지만 해도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 기술해왔던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사=중국사”라는 논리를 공식화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그 논리를 배태시킨 「동북공정」의 추진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동북공정」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Chinese Borderland Research Center)의 홈페이지<sup>17)</sup>에서는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으로 “개혁·개방 이래 東北邊疆(滿洲)의 국제관계가 변화했다는 점, 동북변강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면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 일부 국가(사실상 남북한을 지칭함)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연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 몇몇 政客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릇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東北工程領導小組’ 組長인 왕뤄린(王洛林)<sup>18)</sup>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즉 그의 글에 의하면 “고대 중국 동북지방의 屬國정권인 고구려·발해 등이 고대 조선족(韓民族)의 독립국가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남북한의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 중국 동북변강이 역사적으로 고대 조선의 영토였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은 중국 길

림성 연변지구의 근대 조선인 이민문제에 불과한 ‘간도문제’를 ‘邊界(국경)문제’로 삼아 영토를 요구하고 있고,<sup>19)</sup> 새로운 교과서나 매체를 이용하여 제멋대로 기이한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러시아의 학자들과 지방 관리들도 중·러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고, ‘中國威脅論’<sup>20)</sup> 등 중·러 友好를 損傷시키는 여론을 조성하여 東北邊疆과 러시아 시베리아 및 遼東지구와의 정상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일본학자들과 서방학자들도 유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sup>21)</sup>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된 학술적인 배경은 길림성 副省長으로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취엔저쭈(仝哲洙)의 말에 잘 집약되어 있다. 즉 “최근 국제적으로 일부 적대세력이 중국에 대해 침투와 분열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사람이 학술연구라는 명분으로 역사문제를 이용하여 많은 글을 써대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제멋대로 고치고 중국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적대조직은 민족문제와 종교문제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중국에 침투하여 중국인을 농락하고 분열시키고 유혹하고 제멋대로 事端을 일으켜 중국영토의 완결성과 사회안정,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자들의 관심과 중국 국무원의 대대적인 지지와 지도 속에서, 「夏商周斷代工程」의 뒤를 이어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의 3개 省에 위탁해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었다.”<sup>22)</sup>

상술한 「동북공정」 핵심 관계자의 주장을 살펴

16) 상세한 내용은 尹輝鐸, 「近現代 中國의 高句麗·渤海認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집, 천안: 2004. 12)을 참조 바람.

17) www.chinaborderland.com

18) 2002년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다.

19) 이러한 관점은 焦潤明, 「解決邊界爭議的法理原則」(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29-30쪽에서도 드러난다.

20) 이는 시베리아 및 연해주 지방에서의 중국상품의 범람과 중국인의 商權장악, 중국인 거주자의 급증현상에 대한 러시아 관리들의 경각심에서 비롯된 언급을 일컫는다.

21) 王洛林, 「加強東北邊疆研究 促進學科建設」,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4-5쪽.

22) 앞의 글,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8-9쪽.

보면 「동북공정」은 남북한 학계의 학술적 행태나 주장, 일부 조직의 종교적·민족적 분열행태, 한반도 정세변화 추이에 대한 '대응적·방어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이 방어적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은 「동북공정」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 當代中國邊疆系列研究課題組가 1998년 9월에 작성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정에 미칠 충격(「朝鮮半島形勢的變化對東北地區穩定的衝擊」)이라는 내부문건에서는 한반도의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 지구, 특히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과 遼寧省 丹東地區의 안정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변화 문제를 「當代中國邊疆系列調查研究」의 제2기 프로젝트 및 제3기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항목으로 설정했고, 그 문제 자체가 「동북공정」 추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 吉林省公安局邊防部和 吉林省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동북사범대학 東北亞研究센터, 北華大學 古籍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형세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전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계기는 북한 탈북자 사태 및 1997년 3월 12일 북한의 핵문제 야기된 전시동원령 선포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문건에서는 동북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1997년 하반기부터 길림성 내 중국-북한 변경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와, 吉林省檔案館(문서자료보존소)에 소장된 청대 중국-조선관계 檔案(문서자료)의 수집·정리에 착수했다는 사실, 1998년에 중국 중앙기관에 공작보고서를 연달아 제출해서 중국 중앙부처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 「동북공정」의 추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 문건은 「동북공정」의 중점이 ㉠ 한반도 형세변화의 추이 조사·연구, ㉡ 중국과 남북

한 사이의 역사상의 논쟁점(箕子朝鮮·衛滿朝鮮·고구려·발해·中朝邊界의 형성과 界務교섭, 19세기 중반 이후의 조선인의 만주이민, 조선족의 형성사 연구), ㉢ 동북지구의 아편문제·종교문제·민족관계 문제 등의 논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 대규모 북한 탈북자의 출현 가능성과 그 대책 등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결국 상술한 근거에 의해 「동북공정」의 주요 목표를 고찰해보면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문제만은 아님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강렬한 정치적 민감성을 띤 '학술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관계자인 취엔저주나 왕뤄린의 말대로, 「동북공정」은 지역적 성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전 및 안정과도 관련된 전국적 성격의 문제이며, 중국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동북공정」은, 핵심 관계자의 말대로 학술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애국주의 전통을 드높이고 중국국가의 통일과 안전, 영토주권의 완결, 소수민족 지구의 안정, 민족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치문제인 셈이다.<sup>23)</sup> 또한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한반도의 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대비이다. 역사적 논리는 오히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동북공정」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 및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데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 탈북자 문제가 자칫 동북지구의 '國際難民' 문제로 확산되거나 동북지구가 '한민

23) 全哲洙,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7-9쪽; 王洛林, 「加強東北邊疆研究, 促進學科建設」,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3-4쪽.

족의 근거지'로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차적으로는 한반도 자체 특히, 북한정권 내의 정세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중국은 국가주의 역사관, 특히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구에 적용시켜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고 한다. 동시에 중국국민으로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그들의 동요 내지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동북지구에서의 소수민족 문제 악화는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문제를 자극해서 중국의 국정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중국사” 논리를 일반화시켜 남북한에서의 “만주=한민족의 故土”, “고구려·발해사=한국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해서 조선족사회 및 중국 동북지구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 이와 아울러 남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間島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넷째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한국사”라는 논리가 계속 방치될 경우, 몽골이 元史를, 新疆 위구르족이나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西域史를, 베트남이 秦漢 시기 百越(Baiyue)과 南越(Nanyue)의 역사를 각각 자국사로 주장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고, 중국역사는 여기저기 찢겨져나가 일맥상통한 중국역사의 정립이 곤란해질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다섯째는 북한에서 고구려 문화유적을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막고 중국의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킴으로써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데에 있다. 북한 내 고구려 문화유

적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고구려사=한국사”라는 남북한의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겠기 때문이다.

#### Ⅳ.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동북공정」

상술한 「동북공정」의 의도를 살펴보면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대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문제, 즉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중국이 어느 선까지 대처하느냐에 따라 「동북공정」의 성격은 방어적일 수도 공세적일 수도 있다. 만일 북한정권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지역의 새로운 통치주체가 되어 흡수통일을 시도할 때, 중국이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급속한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을 차단하면서 통일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방어적 성격의 동북아전략’이라고 판단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남한의 흡수통일과 미국 주도의 한반도 및 동북아질서 재편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한반도 북부에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으려 하거나, 親中정권을 세워 한반도 및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시도할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은 ‘공세적이고 패권적인 동북아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동북공정」을 중국의 ‘방어적인 동북아전략’으로 볼 것인지 ‘공세적인 동북아전략’으로 볼 것인지를 판가름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동북공정」의 양대 과제 가운데 ‘기초연구’ 내용만 공개되고 ‘응용연구’ 내용<sup>24)</sup>은 對外秘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용연구의 핵심항목인 ‘한반도 형세변화에 대한

24) 「동북공정」의 2002년도 과제 가운데 응용연구, 즉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예측성 연구와 대비책 연구’ 과제는 8개 항목이 책정되었고, 2003년도의 응용연구 과제도 여러 항목이 책정되었다. 2004년도 이후의 과제 실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비책'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알지 않고서는 「동북공정」이 방어적인지 공세적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분석이나 예측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의 동북아정세를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때 미국의 대응양상은 일단 접어두고 「동북공정」과 관련지어 중국의 대응양상만을 예측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만들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체제의 와해(북한정권의 붕괴가 아닌)<sup>25)</sup>로 인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이다.

전자, 즉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와해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럴 경우 한반도 통일 와중에 북한에서의 내란발생이나 급격한 사회불안으로 북한 난민들(북한 지도부 및 그 가족을 포함하여)이 대폭 증가하여 중국 동북지구는 자칫 「國際難民地帶」 혹은 「韓民族의 根據地」로 될 가능성이 있다.<sup>26)</sup> 이때 북한 탈북자들은 주로 중국 내의 조선족 친척들이나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사회에 주로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 조선족은 북한 탈북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중국국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던 중국의 조선족이나 기존의 북한 탈북자들(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띤 사람들을 제외)은 한반도 통일의 와

중에 대규모로 한반도에 유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조선족은 종래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한국 내 불법체류 조선족과 더불어 돈벌이에 몰두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에 몰들면서 점차 한국인의 성향을 띠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에서는 남한사람·북한사람·조선족·탈북자가 서로 뒤섞여 어울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민족의 人的 네트워크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의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고 동북지구를 「한민족의 근거지」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것은 「만주=한국 땅」이라는 논리와 맞물려 중국 동북지구 및 조선족에 대한 통일 한반도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급작스런 정세변화와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동북아 국제질서를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미군 기지를 압록강이나 두만강 주변에 배치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한·중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술한 가설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에 의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만일 중국이 통일한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및 성향,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최소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받아들이고 통일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추진한다

25)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다른 세력이 등장해 북한의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의 붕괴와 북한체제의 붕괴는 별개의 문제이다.

26) 2003년 8월부터 중국정부는 북한붕괴에 따른 급속한 탈북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중국 접경지대의 경비주체를 公安(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했다고 한다(New York Times, Sep. 16, 2003; 「중앙일보」 2003년 9월 17일자); 김일영·백승주, 「제8장 북한 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심지연·김일영 편,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한미동맹 50년」, 서울: 白山書堂, 2004, 317-318쪽.

는 가정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동북공정」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중국의 동북아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필연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sup>27)</sup>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안보분야 전문가가 예측하는 북한정권의 변화유형은 ㉠ 쿠데타나 집권 개혁 엘리트에 의한 체제변화 시도와 ㉡ 민중봉기에 의한 체제붕괴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개혁세력이 기존정권을 대체한 후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북한의 기존정권이 붕괴되고 일반주민과 여론선도자들이 공산주의 해체를 주장하는 가운데 권력의 空洞化 내지 극단적인 혼란상황이 초래될 경우이다.<sup>28)</sup>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정치·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우회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이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는 조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중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우선 한·중 국경경비를 강화하여 북한 난민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북한 내의 정치적 질서를 회복하고 체제붕괴를 방지하는 정치적 조치를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체제붕괴가 기정사

실화되고 한·미 연합군의 北進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은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이 맺은 朝中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및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빌미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9)</sup>

결국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중국의 대응양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만주전략’<sup>30)</sup>이자 ‘동북아전략’인 「동북공정」은 중국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대응양태를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인 셈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인 전략인가?’ 아니면 ‘방어적이면서 또 공세적인 성격을 띤 전략인가?’

㉠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발해=중국사”라는 逆논리를 내세워 동북지구와 한반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해서 남북한에서의 “고구려·발해=한국사” 논리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점, ㉡ 그동안 남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동북지구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를 주저해왔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구에도 적용시켜 그 논리의 완결을 꾀하려고 했다는 점, ㉢ “만주=한국 故土” 논리가 중국 내 조선족의 혈통의식을 자극하고 정체성을 동요시키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지구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여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한다는 점, ㉣ 조선족문제가 다른 지역의 소수민족 문제를 확산시키는 기

27) 1990년대 중반에 나온 북한붕괴 관련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앞의 글, 「제8장 북한 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334-352쪽을 참조 바람.

28) 김태호, 「미·중의 북한 개입: 어디까지 이루어질까?」, 「전환기의 한반도: 과제와 대응」(통일경제연구협회 주최 비공개 통일경제정책워크숍 자료집), 2004. 8, 11쪽.

29) 위의 글, 「미·중의 북한 개입: 어디까지 이루어질까?」, 12쪽.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 자체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동반개입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직접개입보다는 간접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위의 글, 「제8장 북한 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338쪽).

30) 윤휘탁, 「만주와 조선족을 다시보자! : 중국의 만주전략」, 한겨레신문사 편, 「한겨레21」 제486호, 2003년 12월 4일, 32-34쪽.

폭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는 점, ㉔ 남한에서 「間島協約」의 무효화를 내세우면서 「간도영유권」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과거 한·중 사이의 국경·영토 교섭과정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동북공정」은 「방어적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㉕ “북한지역이 漢四郡의 관할구역이었으므로 원래부터 북한지역은 중국 땅이었다”거나, ㉖ “李氏朝鮮이 北進政策을 통해 청천강 이북의 중국 땅을 빼앗아 갔다”고 하여 한반도 영역의 역사에까지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부여하고 한반도 영토에까지 역사적 영토귀속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㉗ “한반도의 族屬은 고조선·고구려·발해 민족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고 한반도 남부의 三韓을 모태로 한다”고 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마저 왜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동북공정」은 결코 「방어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동북아전략이 아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측의 논리는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중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 내지 영유권까지를 염두에 두고 내세우는 대내외적 명분 찾기”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여튼 우리는 「동북공정」 속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로 상술한 논리를 내세워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처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31)</sup> 이는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편 논의의 방향을 정치적·군사적 관점으로

둘러보면, 통일문제 전문가의 진단처럼, 「동북공정」을 「공세적 성격도 내포된 중국의 동북아전략」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즉 「동북공정」에는 한반도의 급작스런 정세변화에 따라 수반될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중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연관지어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동북공정」을 중국의 공세적인 동북아전략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는 「동북공정」을 학술적인 문제라기보다 북한의 유사시 통일한국을 가정한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의지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안으로 파악한다. 즉 그에 의하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북부지역(지금의 북한)이 과거 한사군의 관할구역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연고권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이란다.<sup>32)</sup>

통일문제와 관련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흡수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환상」이고 「착각」이라고 본다. 가령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에게 의하면 19세기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끝까지 주장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내 親중국 성향의 軍部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 국제법적 선행조치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이 필요한데, 그것이 「동북공정」으로 표출되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동북공정」의 예산 200억 원(韓貨 약 3조원) 가운데 대부분이 군사예산

31) 윤휘탁, 「고구려사 變기」 중국의 노립수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북한 연고권 주장 명분 쟁기?, 동아일보사 편, 「신동아」 2004년 9월호, 360-375쪽.  
32)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원이 정범구 박사와 좌담한 내용. 즉 「동북공정에 숨은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욕,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CBS 뉴스 2004.8.19(목) 13:40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일 것이라는 점,<sup>33)</sup> 2003년 8월부터 중국정부가 북한 접경의 국경경비 주체를 변방부대나 경찰조직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꾸고<sup>34)</sup> 한·중 국경 부분에 인민해방군 15만 명을 배치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유사시에 강을 넘어오겠다는 渡上연습을 거의 완료했고, 중국군 장교들이 조선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들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는, 최근 우리사회의 脫美경향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상당히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야심과 맞물려 자칫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간에 뒷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sup>35)</sup>을 우려한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금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칫 우리가 유사시에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단계라고 규정한다.<sup>36)</sup>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초 어느 잡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적이 있다. 즉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주체가 못 된다”<sup>37)</sup>는 기사내용이다. 즉 북한정권이 붕괴되어도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이 보도에 의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때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권은 미

국과 중국이 행사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자칫 배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휴전협정 당사국이 미국·중국·북한뿐이고 우리는 당사국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휴전상태의 변화, 즉 한반도의 정세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국제법적 제약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술한 내용들을 고찰해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의 동북아전략’이지만, 한반도 정세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공세적으로 바뀔 개연성을 내포한 동북아전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는 방어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 공세적 성격을 띤 중국의 동북아전략’인 셈이다.

##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정부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필요적 관점, 즉 중화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국가·사회적 통합과 그것을 통한 체제의 유지·안정이라는 거시적인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중국은 동북아의 역사를 裁斷하고 왜곡함으로써, 한·중간의 역사적 논쟁점이나 조선족에 대한 흡인요소, 영토 관련 분쟁거리, 중화민족 단결에 해로운 논조를 송두리째 잘라내고 있다.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중화민족의 각 민족

33) 물론 「동북공정」의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군사예산일 것으로 추측하는 그의 분석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중국 동북지구 내 고구려·발해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화유적 주변 民家の 이주 및 재건축, 진입로 신설 및 확장, 문화유적 주변 환경 정비, 문화재 자체의 보수·정비 등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도 「동북공정」 예산 가운데 순수 학술경비는 한화로 27억 원이다. 이는 중국의 물가가 한국의 1/5 수준, 중국교수의 봉급이 한국교수 봉급의 1/1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경비는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4) *New York Times*, Sep. 16, 2003; 「중앙일보」 2003년 9월 17일자.

35)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국, 러시아와 공동 관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日高義樹, 「アメリカは北朝鮮を核爆撃する」, 東京: 徳間書店, 2003).

36)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원이 정법구 박사과 좌담한 내용, 즉 「동북공정에 숨은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욕」,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CBS 뉴스 2004.8.19(목) 13:40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37) 김재환, 2004, 「북한 붕괴되면 연고권은 중국에 있다? 한국이 통치 주체였다는 선례 없어 美·中이 주도권 행사할 수도」, 「뉴스위크」(한국판) 2004년 2월 4일자, 제615호; 김일영·백승주, 「제8장 북한 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심지연·김일영 편,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321-366쪽.

이 이루어낸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현재적 편의의 사관이나,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당연히 중국인이며 중국민족”이라는 민족관은 모두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범주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이나 영토의 귀속권을 규정해버리는 ‘영토 지상주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공정」의 논리는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상징이었던 책봉-조공 관계를 근거로 해당 민족의 왕조나 국가를 중국의 속국이나 자국의 범주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新中華主義’의 부활을 알리는 징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논리적 정합성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역사논리 개발이라는 현실문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공정」은 국가와 역사관이 상호작용해서 도출된 중국의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동북공정」은 학술문제 이외에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나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한반도 전략 내지 동북아전략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공정」은 학술적 대응만으로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외교적·국제 역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동북공정」이 조선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파생된 것인 만큼 조선족을 ‘가난한 중국인’으로 경시하는 우리의 일부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그들을 진정 ‘韓民族’으로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특별법’을 제정

하여 중국동포에게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공조 및 자주적인 남북통일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중국 및 미국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의 자주적인 남북통일은 국력의 증대와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가져와 중국이나 미국의 간섭·통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끊임없는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북쪽을 진정으로 끌어안으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것은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이 향후 북한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및 한민족의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우리의 역사인식에는 과연 부적절한 측면이 없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영토’를 중심으로 민족과 역사의 귀속성을 규정 짓는 중국과,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귀속시키는 우리의 단일민족 사관 사이에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중국정부나 인민에게 우리의 역사인식과 그에 따라 형성된 우리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서양사학자들이 주장하는 “國史解體論”<sup>38)</sup>식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첫째 유

38) 국사의 해체는 1) 역사학을 유럽 중심주의와 ‘길들여진 타자’로서의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2) 동아시아 차원에서 남/북한-중국-일본의 국가권력을 잇는 ‘적대적 공범관계’를 무너뜨리며, 3) 개별 국민국가 차원에서 “특정한 헤게모니 집단이 단일한 의지와 이해를 지닌 국민의 이름으로 전체 주민을 대표하고, 그것을 통해 개별 민족국가 내부의 차이를 은폐하고 억압하는 헤게모니”를 해체시키는 것을 뜻한다(임지현, 「국사의 안과 밖-헤게모니와 ‘국사’의 대연쇄」,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4, 29쪽. 「국사해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영호, 「한국에서 ‘국사’ 형성의 과정과 그 대안」, 위의 책,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453-465쪽 참조).

유럽사회는 고대에는 그리스·로마 문화를,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를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국민국가로 갈라져버렸다. 그 결과 유럽인들은 뿌리의식에 대한 공유의식이 농후하다. 반면에 동아시아 사회에는 한국=穢貳族(혹은 韓民族), 중국=華夏族, 일본=大和族이라는 식으로 삼국이 애초부터 별개의 민족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이들 삼국에는 뿌리의식에 대한 공유의식이 거의 없다. 둘째 유럽사회에서는 침략전쟁을 저지른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유럽인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상호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농후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에는 유럽과 같은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유럽사회의 경우 각 국가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서 상호간에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콤플렉스가 거의 없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사회의 경우 한국·중국·일본 사이의 생활수준 격차가 커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사이의 편차가 크고 상호 배타적 의식이 강하다. 넷째 유럽사회는 체제상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 사회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고 남북한도 분열되어 있어서 사회적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처럼 동아시아 사회는 유럽사회와는 다른,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 사이에 역사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공동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유럽처럼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도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서양적 역사인식을 동아시아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동양적 민족주의를 무조건 폄하하는 역사인식은, 그 자체의 이론적 순수성에

도 불구하고, 자칫 ‘모든 사회가 유럽적인 역사인식을 지녀야 한다’는 ‘西洋史霸權主義’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공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동북공정」의 논리는 동북아 사회 특히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문화적·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나 언론이 국가의 정책이나 공산당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中華 민족주의가 팽창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에 내재해 있는 민족적 자기확대의 그 어떤 경향에 대해 하나의 견제가 될 것”<sup>39)</sup>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힘의 논리가 패권적으로 작동하는 국제질서에서는 민주주의가 統制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팽창적인 민족주의를 제어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sup>40)</sup> 더욱이 중국의 官制的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는 애국주의가 자칫 중화민족의 팽창주의로 전화될 경우, 「동북공정」으로 불거진 동북아 역사 논쟁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인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민족국가를 자극하거나 역사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적이 없었는지, ‘동아시아 역사 공동체’나 ‘동아시아의 평화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김질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절제되지 않은 ‘애국적’ 행위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애국’은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작동할 때에만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 ‘배타적인 애국’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각자의 역사를 더

39) Lakoff, "Democracy", Alexander J. Motyl ed., *Encyclopedia of Nationalism*, Vol. 1, *Fundamental Themes* (New York: Academic Press, 2001), p. 117.

40) 최갑수, 「동북아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동북공정, 민족주의, 동북아의 미래」(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4년 11월 11일), 7쪽.

들어보고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이다!

이와 동시에 「동북공정」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구를 포괄하는 중국의 ‘동북아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그 전략이 ‘공세적 전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어쩌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방어적 전략’ 차원에 머물지 ‘공세적 전략’으로 될지는 우리 모두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지혜에 달려있다. 지금은 ‘知彼知己’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뇌해야 할 때다!

## 提 要

### 中國의 [東北工程]與韓半島, 是防禦性的戰略? 還是攻勢性的戰略?

尹 輝 鐸

中國의 [東北工程]是‘防禦性的戰略?’還是‘攻勢性的戰略?’或者是‘既有防禦性又有攻勢性的戰略’呢?

① 中國通過 [東北工程] 樹立起“高句麗 · 渤海=中國史”這一逆向邏輯, 否定東北地區和韓半島的歷史相關性, 企圖拆散南北韓的“高句麗 · 渤海=韓國史”這一邏輯。② 這期間考慮到與南北韓之間的關係, 唯獨在東北地區一直猶豫不決未推行的‘統一的多民族國家論’現在也要推行, 這是企圖使其邏輯更加完整的做法。③ “滿洲=韓國故土”這一邏輯刺激了中國國內朝鮮族的血統意識, 動搖了其本體性, 在這種情況下, 中國企圖否認韓半島與東北地區的歷史關聯性, 擺脫韓半島對朝鮮族社會的影響, 樹立朝鮮族的本體性。④ 防止朝鮮族問題成爲其他地區少數民族問題擴散的催化劑, 事先加以解決。⑤ 爲了對應南鮮提出的 [間島協約] 無效化以及 ‘間島領

有權’動搖的情況, 作爲 [東北工程] 的一部分, 對韓中間的國境、領土交涉過程進行分析和尋找對應論理。考慮到以上幾點來看, 中國의 [東北工程] 可以說是 ‘防禦性的戰略’。

但是, 通過 [東北工程] 中以下幾點又可以看出 [東北工程] 絕不僅僅是停留在防禦性上的東北亞戰略。① “北韓地區是漢四郡的管轄區域, 因此從前就是中國的領土”。② “李氏朝鮮通過實施北進政策, 掠奪了清川江以北的中國領土”, 對韓半島領域的歷史賦予中國歷史淵源權, 對韓半島的領土賦予歷史性的領土歸宿邏輯。③ “韓半島的宗族歸屬與古朝鮮, 高句麗, 渤海民族幾乎沒有關係, 是以韓半島南部的三韓爲母體的”, 對韓民族的根源可以歪曲。

中國의 這一邏輯使部分韓半島專家生產了“中國針對北韓地區的淵源權以及領土權來對內外討名分”的疑惑。從政治以及軍事方面的觀點來看, 就象統一問題專家所指出的一樣, [東北工程] 是具有 ‘攻勢性質的中國의 東北亞戰略’。即中方要在隨着韓半島急劇變化的政局而引起的東北亞國際秩序的變化中靈活對應, 以此來確保中國的地位, [東北工程] 與中方的這一意圖是有着關係的。

綜上所述, 中國의 [東北工程] 可以說是 ‘基本上是具有防禦性質的東北亞戰略’, 但隨着韓半島政局變化與否, 可以 ‘轉換爲攻勢性的東北亞戰略’。即中國의 [東北工程] 是 ‘基本上是防禦性的, 但部分也具有攻勢性的中國의 東北亞戰略’

關鍵詞: [東北工程], 防禦性的戰略, 攻勢性的戰略, 東北亞戰略, ‘間島’領土權, 高句麗.